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2. 6.28.(화) 10:00 2022. 6. 28.(화) 석간	배포 일시	2022. 6. 28.(화) 10:00 이후
담당 부서	노동시장정책관실 일자리정책평가과	책임자	과 장 이영진 (044-202-7227)
		담당자	서기관 박지혜 (044-202-7228)

「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」 발표

- 2021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-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28일 개최된 **제29차 국무회의**에 「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」을 보고했다.

○ 올해는 지난해 추진된 **207개 일자리사업**에 대해 평가했으며

- 코로나19 회복 **이후 일자리사업 재정비 및 고성과 사업 중심 투자 확대**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.

○ 일자리사업 평가는 매년 각 부처가 제출한 **사업별 실참여자 정보를 행정데이터와 연계**하여 유형별 성과지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

- 이와 함께, **현장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, 외부전문가로**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, 실집행률 등을 종합한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방식으로 실시된다.

- 올해 성과평가 대상('21년 사업 207개, 등급 부여 169개)

구 분	'20년 사업('21.6 발표)	'21년 사업(올해 평가)
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수	214개(100%)	228개(100%)
평가대상 사업수	171개(79.9%)	207개(90.8%)
등급부여(평가보고서+등급)	145개	169개 *절대평가 61개
등급없음(평가보고서)	26개	38개
미평가	43개(20.1%)	21개(9.2%)

* 미평가(21개): '22년 폐지되었거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목록에서 제외된 사업
* 등급미부여사업(38개): 장애인사업, 실업소득유지사업, 작년 우수등급사업
* 절대평가(61개): 신규사업, 탈북자 등 특수사업, 인프라 사업 등 정량지표 부재 사업

- 성과평가 추진 과정

① 모니터링 ['21.10~`22.1월]	② 만족도조사 ['21.10~`22.1월]	③ 정량지표 ['22.1~4월]	④ 정성지표 ['22.1~4월]	⑤ 등급부여 등 [`22.5~6월]
▸수행기관 현장 모니터링	⇨ ▸취업 도움 정도 등 조사	⇨ ▸사업 유형별 지표 산출	⇨ ▸자체평가보고서 ▸설명회·협의	⇨ ▸등급 부여 ▸평가보고서 마련

< '21년 일자리사업 현황 >

□ (예산)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**30.5조원**(본예산), 24개 부처 228개 사업이며,

○ **실업소득유지·지원(12.5조), 고용장려금(8.4조), 직접일자리(3.2조)**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과 생계 안정에 주력했다.

○ 집행액은 추경(+6.7조원) 포함 **35.2조원**(실집행액 33.6조원)이었다.

< '21년 일자리사업 유형별 집행 현황(억원) >

유형	합 계	직접일자리	직업훈련	고용서비스	고용장려금	창업지원	실업소득
본 예산	305,131	31,599	22,648	17,330	84,106	24,071	125,377
예산현액	371,863	42,328	26,232	18,480	116,311	27,704	140,809
집행액	352,208	41,615	24,190	16,150	108,795	27,702	133,757

* <예산현액> 본예산에서 추경증액, 내역변경, 이월을 모두 합산

□ (참여자) **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.5만명** 규모였으며,

○ 유형별로는 **실업소득 253.2만명, 직업훈련 213.6만명**, 고용서비스 127.3만명, **직접일자리 101.1만명** 등이다.

* 각 부처가 제출한 실참여자 정보('21.1월~11월)를 고용보험DB와 연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'순인원' 기준으로 분석(한국고용정보원, EPAS)

* (제외) '21.12월 참여자 변동, 분류불능 데이터, 추경 신설사업 참여자**
↳** 6개월 이내 취업 등 성과지표 관련 데이터 수집에 상당시간 소요('22.하 별도분석)

○ 연령별로는 **참여자의 약 70%가 청년, 중장년(54세 이하)**으로 주로 직업**훈련과 고용서비스**를 중심으로 지원받았다.

- '65세 이상'은 112.7만명(14.5%)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(83.8만명)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직접일자리(101.1만명)는 노인일자리 83.6만명(평균연령 75.1세), 나머지 직접일자리에 17.5만명이 참여했다.

< 성과평가 결과 >

□ (총평) 적기 재정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**고용위기에 적극 대응**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며,

○ 사업 간 유사·중복성 등 직접일자리 구조조정,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**인재양성 확대**, 적극적 노동시장정책(LMP)의 **취·창업 기능 회복**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.

□ (등급부여) ’21년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마련했으며, 이 중 **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 부여**했다.

* 미평가(21개): ’22년 폐지되었거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목록에서 제외 사업
* 등급미부여사업(38개): 장애인사업, 실업소득유지사업, 작년 우수등급사업

○ 등급은 <우수> 19개, <양호> 80개, <개선> 38개, <감액> 32개이며,

- **<우수> 등급**은 청년·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증대 및 취업역량 확대에 높은 성과를 거둔 사업들로 유형별로 선정됐다.

- **<감액> 등급**은 저성과, 실집행률 부진, 코로나19 후 정비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 **직접일자리(13개)·고용장려금(6개) 중심으로** 선정됐다.

<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4등급 부여 현황(사업개수) >

지난해 성과평가						구 분	올해 성과평가					
평가 대상	등급 대상	우수	양호	개선 필요	감액		우수	양호	개선 필요	감액	등급 대상	평가 대상
38	38	4	21	7	**6**	직접일자리	4	13	8	**13**	38	40
41	41	4	22	12	**3**	직업훈련	3	22	14	**5**	44	47
35	18	1	10	5	**2**	고용서비스	4	25	7	**4**	40	40
34	27	3	16	7	**1**	고용장려금	5	11	4	**6**	26	28
23	21	2	12	5	**2**	창업지원	3	9	5	**4**	21	22
171	145	14	81	36	**14**	합 계	19	80	38	**32**	169	207

□ (후속조치) 평가결과는 **’23년 예산과 연계**되며, 감액등급은 감액 요구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**사업 재설계방안을 마련·이행**하게 된다.

* 지난해 평가결과(정부안 기준): 감액 평균 –28.1%, 우수 +14% 증액 반영

<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>

□ **성과평가 결과** 및 경기 전망, **신산업 전환 가속화** 등 **노동시장 여건을 고려**한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첫째, 일자리사업의 **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한다.**

- **(폐지 11개)** 코로나19 단계적 종료 등을 고려하여 직접일자리 7개, 고용장려금 4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

< 단계적 폐지 11개 사업 >

’23년 지방이양: 경찰청<아동안전지킴이>, ’23년부터 민간위탁: 특허청<해외지식재산권보호>
’22년까지 운영: 행안부<지역방역일자리> <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(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)>
고용부<고령자고용환경개선지원(융자)> <특별고용촉진장려금>
<청년추가고용장려금> <청년채용특별장려금>
’25년까지 운영: 환경부<스마트댐안전관리> <댐유지관리디지털화> 문화재청<매장문화재보호 관리>

○ 둘째, **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**과 **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한다.**

- 신산업 분야 적시인력공급을 위해 인력수급전망을 기반으로 신산업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, 직무전환·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 확충

- 기업별 맞춤형 전담지원*을 실시하고,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 제공(HRD-Net 개편), 직업훈련사업의 평가대상 확대 등 총괄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도 추진

* <고용센터>진단·분석(기업도약패키지)→<인력공단>능력개발주치의+기업직업훈련카드(신규)

○ 셋째, **적극적 고용정책 본연의 역할인 취·창업 기능 회복**을 추진한다.

- 고용복지+센터 및 특화기관(새일센터, 제대군인센터 등)간 기능 재조정, 맞춤형 패키지서비스 도입(청년도약·기업도약패키지),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

-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고, 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노인일자리의 시장형 중심 고부가가치화 추진

○ 넷째, **고용안전망 강화 및 조기취업 촉진**을 강화한다.

- 지속적인 고용안전망 확충과 함께, 반복수급자에 대해 급여·대기기간을 조정하고 강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

○ 마지막으로, **일자리 사업 관리체계의 효율화**를 추진한다.

-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제출서류·대기기간 획기적 축소(일모아시스템), 적정규모·배분기준 마련(한고원, '23년 시범)

* ('23년부터) 행정데이터 연계로 11종 제출서류 생략, 선발 대기기간 축소(7~10일 → 1일)

-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참여자 현황 등을 투명하게 관리·발표

□ 이정식 장관은 "**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**을 확대하여 **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**해 나가겠다"라고 강조했으며,

○ "이를 위해 **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**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**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강화**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별첨: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